

# 국토부 수탁 10건 등 연구과제 35건 수행

● 201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렇게 일했다

2013년 12월 23일 (월)

코스카저널 ✉ webm

**징벌적손배제 연구결과 정부정책에 반영**  
**저가낙찰공사 직불제 등 업계 입장 대변**  
**전문건설협회 싱크탱크 역할 충실히 이행**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한해 모두 35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의뢰한 연구과제 14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의뢰한 연구과제 9건, 자체과제 1건 등이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정책과제도 10건이나 된다.

전문건설협회 의뢰과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방안 등 업역 확대부터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등 적정공사비 확보, 부당특약 개선방안 등 하도급거래공정화, 회생절차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지급방안 등 유동성 확보방안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이익확대에 필요한 방대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과제는 조합신용평가모형 개선, 공사이행보증 확대방안,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등 신상품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의 수익을 확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탁한 과제로는 해외건설현장 하도급계약서 작성,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방안, 전문건설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설기능등급제 도입운영방안 등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목적으로 의뢰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한해 외부 수탁과제 10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연구를 수행, 이론적·실증적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사진은 건정연이 지난 7월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호주 정부의 개선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시스템' 세미나 모습.

연구원은 이론적·실증적 뒷받침을 통해 전문건설업을 위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에 연구원이 수행하고 발표를 통해 제안한 정책대안이 대거 반영됐다. 또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선방안, 하도급적정성심사제도 개선방안,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대금 직불의무화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해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1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A등급 이상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저가낙찰공사 직불 의무화 등 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이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핵심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전문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영향이 오랜 기간 미치게 됨을 감안하면 성과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 연구원의 자체 평가이다. 또 자체적으로 수행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효과 및 도입방안'은 종합건설업계와의 참여한 대결과정에서 전문건설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연구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76건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연구의 대부분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확보하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로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연구원이 아닌 대학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면 막대한 비용은 차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건설업을 제대로 아는 연구자를 찾기도 어렵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기꺼이 전문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연구를 맡아 줄 연구기관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

© 코스카저널(<http://www.koscaj.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창닫기